

고물가 시대... '맛집' 아닌 '학생식당' 찾는 대학생들

지갑 얇은 대학생들 “저렴하다” 자취 등 물가 부담에 식비 줄여 5000원 밥값도 버거워 편의점행 인근 식당 “개강특수 옛말” 한숨



21일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한규빈 기자**

“역시 학생식당이 싸네- 저녁도 여기서 먹을까?”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지속되는 고물가 현상 탓에 대학교 점심시간 풍경도 변화하는 모양새다. 학생들은 ‘맛집’ 대신 학생식당(학식)과 편의점으로 몰렸고, 개강 특수를 기대하던 인근 식당들은 ‘코로나 때와 차이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학생식당, 점심을 먹기 위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줄이 1층 로비까지 늘어져 있었다.

이곳의 학식 가격은 ‘5000원’. 물가가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갑 얇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다. 긴 대기 끝에 겨우 식판에 음식을 담은 학생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이어갔다.

배식을 기다리던 백민지씨는 “올해는

물가가 부담되는 탓에 작년과 달리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점심으로 학식을 먹는 것 같다. 식당에서 사 먹는 것과 1000~2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메뉴도 다양하고 맛도 괜찮다”고 말했다.

학생 박범수씨 역시 “외부 식당보다 가격 부담도 덜 하고, 공부하다 식사를 해결

하기엔 이곳이 가장 가깝다. 도서관 1층에 편의점도 있지만 도시락 메뉴가 부실해 학식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이곳 학생식당 ‘솔마루’ 역시 학생들로 발 디딤틈이 없었다.

‘솔마루’는 푸드코드 형식으로 한식, 중식, 분식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한다. 음

식은 대부분 6000~7000원대로 일반식당에 비해 저렴하지만 학생들은 그중에서도 더 싼 음식을 고르는 분위기였다.

실제 주문을 위해 키오스크 앞에서 길게 줄을 선 학생 상당수는 5000원 미만의 덮밥이나 도시락류의 음식을 택했다.

이날 4500원짜리 덮밥 메뉴를 주문한 국어국문학과 학생 이모씨는 “선택지가 많은 듯 하지만 결국 싼 메뉴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자취를 하고 있어 물가 부담이 크다 보니 가장 먼저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후문 쪽 식당은 거의 가지 않고 점심은 학식으로, 저녁은 집에서 주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식탁 10개 정도가 마련된 교내 편의점 취식 공간은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이 가득 찼다. 진열대에 대량으로 쌓여있던 간편 식사류들은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다.

인근 벤치에서 편의점 김밥을 먹던 학생 이수민씨는 “요즘 같은 물가엔 한 달 용돈 30만원으로 외식하는 건 기대할 수 없다”며 “학생식당도 저렴한 편이지만, 가끔

저녁 약속이 잡히면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장사진을 이루는 학생식당과 달리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대학가 상인들은 울상이다.

이날 전남대와 조선대 인근 식당은 점심시간임에도 빈 테이블이 더 많았다. 임대 문의가 붙어있는 건물도 즐비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식당들 역시 ‘개강 특수는 옛말’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인근에서 4년간 가게를 운영한 자영업자 신일하씨는 “코로나 이전 학기중과 비교해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 우리 가게는 음식이 저렴한 편인데도 (학생들이) 잘 안 온다”며 “고물가가 이어지니 앞으로도 매출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한탄했다.

그 옆에서 식당을 하는 김해숙씨 역시 “개강 특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점심 메뉴를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데도 학생들이 안 보인다. 경기가 다시 살아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고민이 크다”며 울상을 지었다.

한규빈·강주비 기자

“국가 위신도, 국민 자존심도 내팽개쳤다”

시민사회 한일정상회담 결과 ‘분노’ 양금덕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광주 시민사회가 “명백한 외교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1일 오전 11시께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018년 대법원 판결 당시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가

기 때문에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판결문조차 한 번 읽어보지 않은 것인지 무슨 권한으로 개인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불법노동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녔음에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제3자 배상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호소했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이 한일 양국 사법부조차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의 커녕 기시다 총리한테 ‘강제동원이 아니다’라는 훈계나 듣고 있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재무장화를 용인해달라는 일본이 내민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며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가적 자존심을 ‘봉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규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국내 재단이 기업의 출연금을 조성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성의’와 그에 따른 ‘호응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강조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21일 광주시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받아내지 못하자 ‘빈손 외교’


라며 국민들로부터 못매를 맞았다. **김혜인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